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여성 직장인 35.2%가 성희롱 피해 경험 '비정규직 여성', 38.4%가 '있다'고 응답

“팔뚝을 찌르며 머리를 쓰다듬고, 목소리가 세시 하다고 하고, 샴푸 냄새가 좋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합니다. 팀 회의에서 사장님 옆에 앉히고, 사장은 술을 주면서 손을 자주 잡습니다.”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보단 여성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임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38.4%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경험이 있는 260명의 응답자에게 성희롱 수준의 심각성을 묻자, 절반 이상(58.1%)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여성의 '성희롱 수준 심각' 응답

은 68%로 평균보다 10%포인트, 남성(43.9%)보다 24.1%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의 성희롱 심각 응답(65.3%)은 정규직(51.5%)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7명(69.7%)이 '경험한 성희롱이 심각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가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 성별은 여성 88.2%가 '여성'이라 답했고, 남성 42.1%가 '남성'이라 답했다.

성희롱에 대한 대응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사를 그만두었다'(17.3%)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8%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0.1%, 남성은 6.4%였다.

비정규직의 스토킹 경험은 12.5%로 정규직(5%)

의 2배 이상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의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의 3배 수준이었다.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5.1%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24.1%)이 남성(8.1%)의 3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2배였다.

여성 비정규직은 10명 중 3명(29.7%)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박은하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비정규직'이라는 업무 특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특성을 갖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젠더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단호한 거절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신안소방,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신안소방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체험시설 체험이 어려운 강산초등학교 등 2개소(팔금초등학교) 지역 학생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여주소방,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여주소방서는 지난달 30 ~ 31일 이틀 동안 경호초등학교 등 3개소를 방문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추석 연휴 대비 국가산업단지 현장안전 지도 실시

광양소방서는 추석 연휴 국가산업단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신철 공장인 애경특수도로, 포스코 강판공장에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이 직접 방문해 관계자 현장 안전 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완도소방서는 최근 경기침체, 전복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수산물 생산어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완도=기동채본부



화순경찰, 주민불안 해소 특별치안활동 지속 추진

화순경찰서는 화순경찰 전 기능이 참여하는 '특별치안활동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 될 때까지 관내 범죄취약지를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경찰, 이상동기 묻지마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무안경찰은 지난 8월 31일 19:00 관계기관 및 협력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상동기범죄 예방 특별치안활동 합동순찰 캠페인을 펼쳤다.

무안=이기성기자

'부실 관리' 광주 북구 검토부, 의회 행정사무조사 또 열리나

선수 성범죄 예방·관리 소홀... "대책 미흡하면 조사 나서야" 5분 발언 예고

광주 북구청이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토부) 선수가 저지른 성범죄 비위를 1년 넘게 몰라 일었던 관리 소홀 논란과 관련, 의회 행정사무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기영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최 의원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검토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소속 선수가 성범죄를 저질러 그만두고 실형을 받을 때까지 북구는 사실 인지도 못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급으로 급여·퇴직금까지 지급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행정사무조사에서 허위 전지훈련 등이 탄로 났다. 당시 북구가 자구책을 추진, '환골탈태했다'고 했는데도 선수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감사 결과와 검토부 운영위원회의 쇄신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북구는 검토부 고참급 선수 A씨의 성범죄 비위를 1년 넘게 몰라 부실 관리 책임이 일었다. A씨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긴 채 의원면직(사직)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북구는 헬세로 1850여만 원의 퇴직금까지 지급했다.

북구는 A씨가 지난달 중순 법원에서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야 비위 사실을 알았다. 퇴직금 지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일주일만 지난 후에야 소속 선수의 중대 비위를 안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검토부 훈련장 현장 지도·점검을 했지만 범법행위 예방은커녕, A씨가 성범죄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조차 몰랐다.

이를 두고 허술한 선수단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다.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산하 검토부 선수 1명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

다"며 관리·감독 제도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토부 운영 실태 전반에 걸쳐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수 일탈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감사 시간 중에도 또 다른 선수가 '개인 사정' 이유로 돌연 사직을 신청했다. 특히 사직 배경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 아니냐' 등 의혹이 일었다.

최근 끝난 감사에서도 검토부 부정적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후속 쇄신책에 눈길이 쏠린다.

만약 최 의원의 제안대로 북구의회가 향후 검토부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8대 의회는 검토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정적 운영·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한 바 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허위 전지훈련 ▲구급대 책임용 관중 업무규정 위반 ▲검도 장비 구매 특정 업체 관중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감독이 해임되기도 했다.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직후 북구는 개선안 수립·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유우나기자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

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전북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A, B씨 2명이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3일 A씨가 재직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

어린이 사고 또 날라...물놀이 시설 3곳중 1곳꼴 '위험'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3곳 중 1곳꼴로 사고 위험 요인이 발견돼 개선 조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18일 열흘간 실시한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868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미운영 중인 130곳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했다.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 시설을 표본으로 뽑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총 330건이다. 점검 대상 3곳 중 1곳꼴로 발견된 셈이다.

경기 지역의 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어겼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전북 지역의 시설에서는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운영 중단 조치됐다.

또 어린이 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배수 설비의 출입구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열려있는 곳들이 많았다. 외부 전기설비가 고장난 곳은 신속히 보수·보강하도록 했다.

또 물놀이 중 미끄러진 사고 방지장치나 물놀이장 수심 및 안전수칙 표기가 미흡한 곳이 확인돼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물놀이장 취·배수구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슬비기자